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18
----------	-----

2023. 6. 12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- 나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- 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- 라. 상정일자 : 2023년 6월 12일
 -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영은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적용조항 정비
 - 정보화 관련 용어를 상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(안 제2조)

- 정보화위원회 위원 범위 조정(안 제6조제3항)
- 정보화책임관 업무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정보화 책임관의 역할 및 업무를 추가(안 제7조제1항)
- 정보화 발전 유공자의 포상 근거조항을 신설함(안 제19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 용어를 비롯한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정비해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명과 조례 내용상 확인되는 “충청북도”라는 고유명사 자체가 ‘지역’이라는 범위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굳이 지역정보화라는 중복적인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바, 제명과 조례 제1조 내지 제10조의 내용 중 지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지역정보화→정보화로 변경하였음.
- 안 제2조제4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내용 중 노령자 등→고령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로 변경한 것은, 「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」상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내용과 일치시킨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19조에 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화 발전을 활성화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정보화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정보화”로, “위하여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”을 “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및 「전자정부법」”으로, “규정함”을 “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노령자 등을”을 “고령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”로 한다.

3. “정보화”란 정보를 생산·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)”을 “(기본원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정보화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”를 “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”을 “(기본계획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역정보화를 효율적”을 “「전자정부법」 제5조의2에 따라 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”으로, “지역정보화기본계획”

을 “정보화 기본계획”으로, “지역정보화위원회”를 “정보화위원회”로 한다.
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정보화”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해소, 인터넷 중독”을 “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정보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정보화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「전자정부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”을 “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역정보화위원회”를 “정보화위원회”로, “지역정보화 시행계획”을 “정보화 시행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”를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정보화위원회의 설치)”를 “(정보화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정보화 추진”을 “정보화 추진”으로, “지역정보화위원회”를 “정보화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정보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각각 “정보화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, 정보기술산업분야 및 공간정보분야 관련

실·국장

⑧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(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)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의2의 제목 “(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”를 “(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정보화책임관) ① 도지사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역할 및 정보화 시책의 총괄·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.

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국장으로 하며,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정보화 시책·사업의 종합·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
2. 정보화 정책·계획 등의 수립·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·조정
3. 정보자원의 획득·배분·이용 등의 종합·조정 및 체계적 관리
4.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
5.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
6.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·활용
7.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8. 그 밖에 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

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지역정보화의 추진”을 “정보화의 추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각각 “정보화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정보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”를 “필요한 경우 정보화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정보화”로, “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”을 “정보통합센터를 설치”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정보화의 역기능 방지”를 “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”을 “인터넷 과의존”으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포상) 도지사는 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」 제4조”를 “「충청북도 정보화 조례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·시행 중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위원회로 본다.

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<u>지역정보화</u>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<u>규정함을</u>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“<u>지역정보화</u>”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·주민생활·산업·복지 등 분야별로 <u>정보통신기반을 구축·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</u> 말한다.</p> <p>4. “정보취약계층”이란 정보</p>	<p><u>충청북도 정보화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정보화</u>----- 위하여 「<u>지능정보화 기본법</u>」 및 「<u>전자정부법</u>」----- ----- <u>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</u>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정보화</u>”란 정보를 생산·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<u>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</u> 말한다.</p> <p>4. -----</p>

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·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, 농어촌지역 주민, 장애인, 노령자 등을 말한다.

제3조(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
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제4조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되,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- 고령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---.

제3조(기본원칙) -----

----- 정보화 -----

-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
----- 「전자정부법」
제5조의2에 따라 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-----
----- 정보화 기본계획-----
----- 정보화위원회-----
--.

- ② -----
-----.

1.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

2.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

3. ~ 7. (생략)

8. 정보격차 해소, 인터넷 중독 예방·해소

9. (생략)

10.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7조제2항에

1. 정보화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

2. 정보화-----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-----

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 정보화-----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「전자정부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

① ----- 정보화위원회-----
----- 정보화 시행계획-----
-----.

② ----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7조제2항에 따

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정보화위원회의 설치)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·2. (생략)

3.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, 균형건설국장

3.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

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-----.

제6조(정보화위원회) ① 정보화 추진-----

----- 정보화위원회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정보화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, 정보기술산업분야 및 공간정보분야 관련 실·국장

3. 정보화-----

④ -----

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
간사는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
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⑤ ~ ⑦ (생략)

<신설>

제6조의2(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이
해충돌 방지) ① ~ ③ (생략)

제7조(정보화책임관) ① 도지사
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
수립·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
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
책임관(이하 “정보화책임관”
이라 한다)을 행정국장으로 하
며,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정보화 시책·사업의 종합·
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

----- 정
보화 -----
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
(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)로
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
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
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
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
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
있다.

제6조의2(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정보화책임관) ① 도지사
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8
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
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역할 및
정보화 시책의 총괄·조정 등을
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.

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국장으
로 하며,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정보화 시책·사업의 종합·
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

2. 정보화 정책·계획 등의 수립·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·조정

3. 정보자원의 획득·배분·이용 등의 종합·조정 및 체계적 관리

4.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

5.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

6.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·활용

7.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
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

제8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 ① (생략)

②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

2. 정보화 정책·계획 등의 수립·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·조정

3. 정보자원의 획득·배분·이용 등의 종합·조정 및 체계적 관리

4.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

5.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

6.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·활용

7.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
8. 그 밖에 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장 정보화의 추진

제8조(분야별 정보화의 추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정보화-----

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 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하고,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정보 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·단체 및 외국의 기관·단체·정부 등과 대외협 력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0조(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(생략)

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 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 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

제15조(정보문화의 창달) ① (생략)

-----.

③ ----- 정보화 -----

-----.

제9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----- 정보화-----

-----.

② ----- 필요한 경우 정보화-----

-----.

제10조(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정보화-----

----- 정보통합센터를 설치-----
-----.

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

제15조(정보문화의 창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·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----- 인터넷 과의존-----

-----.

제19조(포상) 도지사는 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 시행('22.7.21.)

-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, 데이터,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, 초연결·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,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필요.

□ 지능정보화 기본법

제6조(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,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(이하 “전략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립·확정한다.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7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지능정보화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
시행령 제6조(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) 법 제8조제1항에서 “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, 지원 및 평가
2.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, 조정 지원 및 평가
3.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·조정
4.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
5.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·관리

□ 전자정부법

제5조(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)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·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(이하 “전자정부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

2.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·제도의 정비
 3.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
 4. 전자적 행정관리
 5.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
 6.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
 7. 정보자원의 통합·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
 8. 전자정부 표준화,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
 9.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
 10.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
 11. 전자정부의 국제협력
 12.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·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 사회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제5조의2(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·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관별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시행령 제4조의2(기관별 계획의 수립)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계획(이하 “기관별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기관별 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기관별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과 함께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5조(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·운영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이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.